

V. 정책적 시사점

- 일본은 선진국 중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는 와중에도 고령화 현상을 개념화하고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관련 법제·기구 등 인프라를 정비해 옴.
 - 고령사회로 접어들기 시작한 1994년부터 고령사회대책기본법 등 범정부차원의 관련 인프라를 정비하는 등 초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시작
 - 또한 前·後期고령자, 보이지 않는 가족, 老老케어, 유니버설 디자인, 연금라이프 등과 같은 고령화의 특징적 현상과 경향을 개념화함으로써 고령화 대책의 기본방향을 가늠케 함.
-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고령화 대책은 아직 정비되지 못하고 있으며 공적연금 등 사회보장제도 역시 지속가능성이 의문시되고 있음.
 - 60세 이상의 고령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정부의 고령화 대책에 만족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.
 - 현행 연금제도는 공적연금 비중이 높고 세대간 및 동일 세대내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는 가운데 단카이 세대가 본격적으로 은퇴기를 맞는 2010년대 후반에는 사회보장비용이 한층 증가할 전망
 - 하지만 현재 디플레이션 탈출에 일차적인 관심이 집중됨에 따라 연금제도 등 사회보장제도 개혁은 정책의 우선순위가 밀리고 있는 실정
- 현재 우리나라는 고령사회에도 진입하지 않아 일본의 상황과 상당히 다르나 13년 후(2026년경)에는 일본과 같은 초고령사회에 돌입하게 되므로 선제적 대응이 절실히 필요
 - 현재 우리나라는 노인 빈곤문제, 공적연금의 낮은 소득대체율, 부동산에 편중된 개인자산, 은퇴문화 미정립 등 일본과 상황이 판이하게 다름.